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2006. 7

통일정세분석 2006-08

---

#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2006. 7

---

김 영 윤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 목 차

I. 문제제기 .....	1
II.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 양상과 특징 .....	2
1. 7·1조치 이후 북한의 주요 경제조치 .....	2
2. 7·1조치 이후 북한 경제 변화 양상 및 특징 .....	3
III. 7·1조치 4년의 북한 경제 평가 .....	9
1. 국가전략으로서의 7·1조치 .....	9
2. 7·1조치 4년의 성과와 파급효과 .....	10
IV. 북한 경제·사회 전망 .....	21
1. 계획부문의 시장의존도 증가 및 시장부문의 지속적 확대 .....	21
2. 개혁 부작용 최소화와 체제 안정화 노력 지속 .....	23
3. 관료부패의 심화 .....	25
V. 북한 경제개혁의 시사점과 대북경협 과제 .....	27
1. 북한의 경제개혁과 변화의 불가역성 .....	27
2. 경제개혁에 따른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	28
3. 대북 경제협력의 과제 .....	28

## I. 문제제기

- 2002년 북한이 추진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현재 시장 확대 조치, 농업 및 기업분야의 개혁 등, 경제개혁 차원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음.
  
- 북한경제는 2002년 이후 완만하지만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7·1조치」에 대한 긍정적 측면도 부각되고 있는 형편임.
  - 2002년 1.2%, 2003년 1.8%, 2004년 2.2%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며,
  - 경제성장의 주요인은 대외무역확대와 외부지원과 함께,
  - 7·1조치에 의한 농업 및 산업분야의 분권화와 인센티브제 도입,
  - 북한 내 유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증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도 기인한 것으로도 판단됨.
  
- 반면, 경제개혁에 따른 사회주의 체제 내적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물가양등, 빈부격차 발생을 비롯하여 매점·매석 및 독과점 발생과
  - 물질주의 팽배 현상과 대중국 경제 의존도 심화,
  - 사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른 자본주의적 가치관 증대 현상 등이 그것임.
  
- 본 보고서에서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북한 경제를 진단·분석, 경제개혁 조치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북한 경제·사회를 전망하고자 함.

## Ⅱ.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 양상 과 특징

### 1. 7·1조치 이후 북한의 주요 경제조치

- 임금(18배), 물가(25배), 환율(70배) 인상 및 배급제 단계적 축소, 사회보장 축소, 기업의 자율권 확대, 인센티브제 도입(02.7)
- 신의주특별행정구(02.9), 금강산관광특구(02.10), 개성공업지구(02.11) 지정
  - 외국인투자은행법(02.11)을 통해 합영은행 등록자본금을 기존의 3천만 원 이상에서 22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대폭 증가
  - 개성공업지구법 및 금강산관광지구법 관련 하위 규정의 지속적 제정 및 발표
- 종합시장 개설, 국영상점의 기관·기업소 임대, 개인사업 허용 등 유통분야 개혁 추진(03.3)
- 농업분야에서 가족 영농제 시범실시, 기업의 계획·생산·판매·노무·이윤처리 권한 확대 등 농업 및 기업분야 개혁조치 단행(04.1)
- 대외경제추진위원회의 내각 직속기관으로 지위 격상(04.5)
-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을 38 달러로 인하, 개성공단 임금수준보다 나은 외자유치여건 조성(04.10)

- 대남경협기구 확대개편(민경련→민경협), 수입물자교류시장 개설(05.6)
- 북남경제협력법 제정(05.7)
- 식량배급제 정상화 조치(05.10)
- 부동산 사용료 징수 발표(06.4)
- 이상의 조치들은 북한의 경제개혁 관련 조치로서 평가되며, 이에 따른 향후 파급효과에 관심을 둘 필요성이 있음.

## 2. 7·1조치 이후 북한 경제 변화 양상 및 특징

### 가. 경제활동의 자율화·개별화·시장화 경향

- 국내 수급여건 및 국제시장의 상황을 고려, 가격을 크게 인상했으며 각종 상품과 노동 및 서비스의 가격을 생산비 개념을 고려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국정가격체계를 조정하고 화폐경제화를 시도
-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인 중앙집권적 결정체계에서 정책결정의 분권화, 경제활동의 자율화 및 효율화 등 계획경제의 ‘연성화’가 이루어짐.
  - 중앙계획지표 축소, 평균주의 타파와 경쟁체제 도입으로 경제의 효율성 창출, 경제적 효과성 강조
  - 비공식적이면서도 당국의 묵인 하에 성행했던 과거의 장마당

에서의 거래품목을 ‘종합시장’에서의 거래로 공식화하고 새로운 시장건물을 건설·운영하는 등 시장형태의 상행위 활성화

- 시장을 합법적인 상품유통체계의 하나로 인정하고 배급체계를 유통·판매체제로의 전환
  - 공장, 기업소들 간 원자재와 부품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각종 원자재 공급을 위한 종합도매시장 운영시도 및 기업소 간 물자교류가 가능
  - 평양을 비롯한 주요도시에 개별 판매형태인 이동매대 등장, 상업활동의 활성화 및 범위 확대
  - 환율의 현실화, 외국인 투자여건의 개선, 경제특구 지정 등 제한적 대외경제개방 의지 표명

## 나. 재정구조 및 운용의 합리화

- 시장원리를 반영, 국가 및 기업 차원의 재정구조 및 운용의 합리화 모색

### (1) 국가차원

- 재정성 산하와 각 성에 집금소(징세기관)를 신규설치(03.9), 효율적 예산수납 체계 구축
  - ‘국가재정은행위원회’를 ‘국가재정금융위원회’로 개편, 재정기관의 역할 강화, 포괄적 금융협의체 확립
  - 각종 보조금 폐지, 예산제 기관 축소, 새로운 재정수입 항목 신설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 노력
  - 국가예산에만 의존해 운영되는 예산제 기관에 대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동시에 예산제, 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기관으로 명문화, 법적인 뒷받침 제공(04.4) → 예산 관리의 효율화 도모

\* 1999년 재정법 제30조:

-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 가운데 자체 수입으로 보장하게 된 자금을 자체 수입으로 보장한다. 예산제로 운영하는 기관은 경비예산자금을 절약하여야 한다.”고 규정

\* 2004년 개정 재정법 제30조:

- “자체수입으로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립채산제로 관리 운영한다. 국가예산에서 일정한 정도의 경비 및 예산 자금을 받으면서 자체 수입으로 생활비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이루어지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반독립채산제로 관리 운영한다. 국가예산에서 경비예산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산제로 관리 운영한다.”

## (2) 기업차원

- 2002년부터 감가상각금을 기업소에 재투자 자금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업의 미사용 여유자금을 국가가 동원하지 못하도록 명문화(2004년 4월 재정법, 36조)
- 종전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던 기업 재투자 자금의 일부를 기업이 자체 조달토록 함으로써 재정지출 요인을 축소
- 회계법(03.3) 제정 이후, 기업경영의 최종목표를 원가절감에 더

해 순소득 증대를 기본지표로 수정(2004년 4월 재정법, 제34조)  
함으로써 이윤 중심의 기업운영을 지향  
- 기업의 국가납부 및 투자, 경영자금 조달체계를 개선하고 자금  
운용에 관한 기업의 재량권 확대

○기업의 국가납부 방식도 기본비율방식과 정액납부방식을 병행,  
기업 부담의 축소를 지향  
- 국가납부금 책정 근거를 계획 지표에 고정하는 한편,  
- 기업의 초과생산분에 대한 처분권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생  
산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기업 보유금을 증  
대시킬 수 있도록 조치  
- 과거 이윤대비 70~80%에 이르던 국가납부금이 30~50%로 축  
소(제9차 평양상품전람회 참관시 확인 사항)

○기업의 현금보유 한도를 확대, 재정지출 한도 이상의 추가 지출 허  
용, 시장을 통한 자재의 적기구입 등 기업경영의 탄력성을 제고

\* “기업은 자금을 생산경영 및 인민적 시책 등에 합리적으로 사  
용해야 한다.”(04.4. 재정법 제29조)

#### **다. 소유범위 및 대상의 확대**

○북한 당국은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개인소유의 상속권을 법적으  
로 보장하고 있음.  
- 2002년 3월, 헌법 제24조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  
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에 따라 4장 57조에 달  
하는 상속법을 제정

- 상속대상 재산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상속법 제13조).
  - 노동에 따른 분배로 갖게 된 재산,
  - 국가 또는 추가적 혜택에 의해 이루어진 재산,
  - 개인부업에 의해 이루어진 재산,
  - 살림집, 도서, 화폐,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 승용차
  - 각종 재산상 청구권과 채무
  - 공민으로부터의 증여 재산 및 합법적 취득 재산 등
  
- 상속재산에 주택을 포함, 개인자금으로 지은 주택은 물론, 국가가 장기 임대방식으로 주민에게 공급한 국가소유 주택의 임대권 까지도 상속 가능하게 했음.
  - 이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하 소유제도상의 큰 변화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본 조치를 바탕으로 향후 개인소유권을 확대하여 토지나 건물을 포함, 생산수단을 사유화하는 방향으로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존재
  
- 소유권 변화와 관련, 북한은 생산량 증가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체제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생산수단의 소유권제가 도입될 경우, 2002년 7월 조치 이후 국가소유의 건물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음식점, 당구장, 노래방, 여관 등 ‘개인업소’가 가장 유력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

#### **라. 생산활동의 세분화 및 효율화**

- 협동농장에 자체 세부 생산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 농장의 재량

권 확대조치 단행

- 작업반 우대제 폐지, 분조관리제 중심의 관리운영으로 전환
  - 40~150명 단위의 작업반 우대제를 분조관리제(15~25명)로 전환, 2~3개 가족농 형태의 농업관리를 추진, 작업단위의 비효율을 개선, 마음이 맞는 가구로 분조를 구성, 노동력과 영농 기자재를 결합, 생산의 시너지 효과 창출
- 협동농장의 독립채산제를 강화, 국가로부터 무상 사용하던 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불(토지사용료)하는 체제로 전환
- 협동농장들은 국가수매를 줄이고 협동농장 자체분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중 일부를 토지사용료로 국가에 지불
- 인센티브 위주의 임금체계 확립
- 성과급 지급으로 직장·월급 차등지급 발생 및 특근 잔업 개념 적용
  - 모든 기업에 대해 '재정공시'를 의무화해 근로자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 Ⅲ. 7·1조치 4년의 북한 경제 평가

#### 1. 국가전략으로서의 7·1조치

- 개혁조치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세부계획을 지시하였으나, 7·1조치 이후부터 국가가 중요지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배인의 권한을 강화시킴.
- 종전에는 산출량 극대화를 지향하였으나, 7·1조치 이후에는 이윤마인드를 허용,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경영청부의 확산과 함께 비용중심의 가격책정에서 수요·공급원리를 부분적으로 채택한 이윤개념을 가격에 도입
- 배급소 및 국영상점을 통한 국가 독점수매·독점공급 체계에서 국영상점망과 시장을 동시에 활용하는 유통망 다각화와 종합시장을 포함, 사적 상업유통을 출현시킴.
  - 생산재는 물자교류시장을 통해, 소비재는 종합시장을 통한 거래가 형성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
- 7·1조치 이전 국가가 노동 정량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는 체계에서 '변수입'에 따라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분배체계가 정착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인센티브제의 확대 적용은 빈부격차를 발생시키는 역할
- 이상에서 볼 때, 7·1조치는 가격현실화를 통해 고난의 행군 당시

급속도로 확대된 ‘자력갱생형 시장’을 공식영역으로 포섭하고자 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주민생활(주민경제 및 일부 내각경제)은 시장영역에 의존하고, 당국은 재정확보를 통해 계획영역(당·군수경제)을 장악함으로써 ‘통제 가능한 내부개혁’을 실시하려 했던 것으로 평가됨.

○7·1조치는 이미 시장 확대라는 변화가 진행된 현실을 인정·수용하는 조치임과 동시에 변화를 관리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점진적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려는 북한 당국의 국가전략(이중전략의 공식화)의 일환으로 해석됨.

## 2. 7·1조치 4년의 성과와 파급효과

### 가. 성과

○물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와 같은 극심한 식량 위기는 극복된 것으로 판단됨.

- 물가수준은 2005년부터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상대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 7·1조치에 따라 부과한 각종 납부금은 재정난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7·1조치를 통해 외부의 자본 투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탕(예: 이윤중시기업경영, 인센티브제 확충, 노동생산성 제고 등)이 마련됨.

- 이윤중시기업경영, 인센티브제 확충, 노동생산성 증대 등 경제관리의 효율화,

- 소비재·생산재 시장 확대 등 상업·유통부문의 시장화 진전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 등 내부 경제운영의 효율화 기반 도모 등
- 내부 경제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외부 투자유치 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나, 실제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함.
- 실물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만한 내부예비 또한 고갈되어 있어 만성적 부족경제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내부적으로 현재 ‘시장화 태동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의 경제조치는 개혁을 공식화할 만큼, 자체에서 충분한 고려를 통해 나온 조치로 평가
  - 7·1조치를 통해 의도한 북한식 개혁은 ‘재정집중화(통제)와 시장화가 동반된 것으로 판단됨.
- 국가의 재정능력을 축소함으로써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시장조정 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몇 년간 재정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배급제 계획에 의한 관료적 조종과 시장조정기제를 병행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됨.
  - 쌀 배급제만 유지하고 다른 부분은 시장에 위임하는 것으로 추정·평가
- \* 북한 예산규모: 1980년대 150억 달러(GNI의 70~90%)→1990년대 90억 달러(환율 1:2.1)→2005년 29억 달러(환율 1:135)→2006년 29.3억 달러(환율 1:143)

- 다만, 2년 연속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등 재정정책상의 문제와 주민들의 의식변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 변화하는 주민의식이 체제 위협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할 ‘통제와 이완의 병행 전략’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어 있는 실정인 바,
  - 최근 북한의 사상교양 강조 동향은 이같은 현실에 대한 방어적 타개책으로 판단됨.

#### <종합평가>

- 개혁 조치들이 시장지향적 개혁을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시장경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엔 아직 무리
- 개혁조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및 임금의 인상보다는 기업의 제한적 자율권 보장과 소득의 차등화에 있음.
  - 자율화, 개별화가 생활수준의 차별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
- 경제조치의 긍정적 측면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은
  - 계획 대상 물자의 비중 감소
  - 생산액 중 직접 판매비중의 증가
  - 구매, 생산, 판매, 가격에 대한 각 생산단위 의사결정권의 제한적 확대
  - 배급제 축소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재 구입 선택권 확대
  - 지방재정 비중의 증가
  -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범위나 개인 부업경리 범위의 확대
  - 대외개방지역의 확대와 환율조정 및 특구조성
  - 인센티브제의 제한적 실시 등임.

○반면, 경제조치가 개혁적 측면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점은

- 시장화를 위한 핵심적 조치인 가격자유화 미실시
- 토지를 포함한 생산수단 소유권 영역의 미개혁
- 독자적인 외자기업의 경제특구 미조성
- 인센티브제도의 한계성 등을 들 수 있음.

○향후 경제개혁을 위해 요구되는 조치로는

- 자율적 임금결정체계의 도입
- 임금의 차등지급이 인센티브로 기능할 수 있는 임금구조
- 기업 자체적인 책임자율경영(생산품목, 생산량, 판매방법 등)
- 생산을 위한 공급체계의 확립
- 원자재 등 물자제공 및 전력을 비롯한 생산 환경의 질적 개선 등임.

## 나. 7·1조치의 파급효과와 부작용

(1) 무질서, 무허가 상거래 행위의 증가

○평양 등 대도시 길거리에서 판매대 없이 물품을 판매하는 현상 증가

- “사회조직 및 청량음료 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나라에 흔한 원료를 간이매대, 이동매대 같은 것을 꾸려놓고 판매하여야 한다.” (2004년 개정 상업법 제42조)
- “상점, 식당, 봉사소를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제66조)

○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점, 식당, 봉사소에 대해서는 운영을 중지시키고 벌금을 물리는 것(제89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무분별한 상거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2) 생산물의 임의처분과 임의 가격결정 행위의 증가

○ 공공 생산품이나 물자가 기업소나 공장에서 개인적으로 유용, 임의 처분되는 현상과 공급 부족에 따른 물가불안을 이용, 가격을 자의적으로 수정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기관·기업소 및 단체의 책임자들이 불법적으로 개인에게 생산 제품을 준 경우,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규정
-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처벌
- 가격사업질서를 어기고 가격을 제정·적용하였거나 국가가 정한 가격을 승인없이 고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 (3) 신중 경제사범의 증가

○ 반사회주의적인 행동 및 사회주의 기초를 흔드는 행위 점증

- 개인간 사적인 상거래가 부분적으로 허용됨으로써 재산을 축적하는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간 빈부격차 발생
- 대외무역의 확대로 사회주의 경제질서에 반하는 새로운 경제적 이탈행위 증가
- 절도, 강탈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
- 경제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문이 18개에서 74개로 확대되었는 바, 이는 7·1조치에 따른 사회변화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음.

- 외화관리 부분이 강화된 것이 개정헌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임.
  - 화폐위조죄, 위조화폐사용죄, 증권위조죄, 위조증권사용죄, 무현금결제수단의 비법발급, 외국화폐매매죄, 외화질서위반질서조항 신설

#### (4) 계층 분화·갈등 및 사회양극화 현상 점검

- 대규모 공장들의 낮은 가동률 및 가동중단에 기인한 실업자 발생과 이에 따른 사회 양극화 현상 초래
  - 공장가동률 15~20% → 실업발생, 시장유입
  - 인센티브제 실시로 우량, 부실 공장 근로자간 임금격차 발생
  - 시장 발달로 초보적 자본가(고리대금업자) 형태 출현
- 물가상승(인플레이션)에 따른 주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
  - 7·1조치로 물가는 평균 25배 인상되었으나, 임금은 평균 18배로 실질 구매력은 저하
  - 각종 명목의 사용료 징수와 토지사용료 및 철도요금 등 생산 및 서비스 관련 요금의 대폭 인상
  -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 표방에도 불구하고, 각종 명목의 교육비 납부와 약값의 개인 부담 증가
  - 밀주생산, 생산제품의 불법적 처분, 주민연료공급질서 위반, 군수품 횡령 매매, 국가재산 약취 등은 물자와 자원 부족 등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주민생활의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 공급부족으로 인해 국영상점에서 식량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졌으며, 과거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여 식량을 조달하는 사태도 발생

○ 빈부격차 확대

- 가격체계 개혁과 배급망 축소는 북한 주민의 빈부격차를 확대
- 당 간부 등은 외화에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으나, 도시 노동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임금분배 형태도 현금임금과 현금·현물임금으로 대별되며, 2004년 이후 기업실적에 따라 월 1~5만원을 받는 고임금 노동자가 생겨나고 있음.
- 만경대협동농장(월 현금 7만원), 외화별이기업(월 현금 2~3만원대), 합영기업(월 현금 1~2만원대 + 부상 상품지급), 일반기업(월 현금 3,000원)
- 임금격차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협함으로써 부수입을 위한 경제활동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70~80% 정도를 식품 구매에 지출하는 상황 발생

(5) 사상 이완, 사회주의 체제 '연성화' 가속

○ 경제변화는 정치·사회·문화 전반으로 그 영향력이 파급되고 있음.

- 개인주의, 실리주의 등 시장친화적 의식 확대
- 사회주의 사상이완
- 각종 시장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부패, 일탈행위 만연 등

○ 과거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던 상황에서 탈피해, 주민들 각자가 생계를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 대두

○ 특히, 경제특구에서의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체제사상 체계의 기반이 약화

- 개성공업 지구에서의 북한 근로자들이 사상 총화와 별도 노력동원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의 야근 및 휴일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
- 쾌적한 근무환경 및 간식 제공 등으로 북한 근로자들의 외적 모습 호전과 함께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어 공단을 개발하는 과정을 직접 보면서 남북의 격차를 실감
- 개성 주민들의 대남 인식이 우호적으로 전환되고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기도 함.
- 남한의 사상·문화유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 이에 대한 유의를 남한 당국에 강하게 요청

#### (6)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

- 2000년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기점으로 북·중간 경제협력은 급진전
  - 북·중 교역 및 중국의 대북투자 증가
-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
  - 따라서 한반도에서 자국의 역할과 지분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
- 이는 중국의 독자적 대외 인식으로 그 근거에는
  - 러시아 및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해체 이후 아직까지 국제사회의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 민족·종교·영토분규가 국제사회의 대립·갈등 국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과

- 미국의 패권주의, 일방주의, 대외적 영향력 제고 등 중국의 정치, 경제, 안보적 이해관계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자리 잡고 있음.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증대가 7·1조치 이후 크게 제고되고 있는 것은 본 조치에 따른 중국 수출시장으로서의 북한 비중 증대, 산업분야의 생산증대를 위한 중국 자본의 유치의 필요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04년 북한의 대중 교역은 13.9억 달러로 북한 대외무역의 약 48%를 차지
  - 2005년의 경우 52%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의 대중국 교역액 및 비중 변화>

연도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4
교역액 (백만달러)	9.0	5.4	6.5	3.7	7.4	10.2	13.9
전체교역비중 (%)	33	26	30	25	33	43	48

자료: KOTRA, 중국해관통계

○주요 대중 수출품은 기초 원자재 중심

- 수산물, 광물성 연료, 철강, 아연, 나무 등 6개 품목
- 6개 품목이 전체 대중 수출액의 80.8% 차지(2005년 1~9월)
- 2004년 이후, 대중 수출품 중 광물성 연료가 크게 증가(2004년 207.8%, 2005년 9월까지 125.3%)
- 배경: 유가급등에 따른 중국 내 대체 에너지 수요 발생과 중국의 에너지 부족현상으로 북한 석탄 수입 증가에 기인

- 주요 대중 수입품은 에너지와 식량 및 생필품
  - 곡물, 식용유류, 전기기기, 플라스틱 제품을 비롯, 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기계, 철강 등
  - 에너지 조달은 거의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 총 원유 도입량의 86.8%를 중국으로부터 도입(2004년)
  
- 1984년 북한의 합영법 제정 이후 1995년까지 중국의 대북한 투자는 3건에 불과
  - 1999년 말까지 중국의 대북한 투자기업은 식당, 상점, 수산양식업 등 6개, 투자 누계액은 188만 달러
  
- 2002년 7·1조치 이후 대북 투자 급속히 증가
  - 2002년 약 70만 달러
  - 2003년 약 100만 달러
  - 2004년 약 5,000만 달러
  - 2005년 약 1억 달러
  
-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은
  - 지하자원 및 목재 등 원자재 개발
  - 에너지, 항만 및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사용권 확보
  - 의류, 신발, 식품 등 소비재 상품의 대북 수출과 백화점 및 호텔업 등 서비스업 진출 등으로 구분
  
- 그 중에서도 북한의 자원개발 분야에 중국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원자재 공급처 및 저임금 국가로 활용
  - 북한 유용광물을 개발, 원자재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는 중국의

경제개발에 활용

- 이는 중국 정부의 국가전략의 하나인 투자진출정책 기조와 연결
  
- 북한으로서는 7·1조치에 의거한 생산력 확보를 위해 해외자본 및 기술 유치 대상국으로서 중국이 가장 적격임.
  - 특히, 북한 지역의 생필품 생산 및 광산개발 등은 북한 단독으로는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임.
  
- 북·중 경제적 긴밀도는 최근 정치적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는 경향
  - 김정일 위원장의 남순강화 코스 방문(06.1), 북 경제관료의 중국 방문(06.3 장성택 등), 두만강변 북·중자유무역시장(무관세 지대) 설치, 5개항(남포, 원산, 신의주, 흥남, 라진) 개발을 위한 북·중간 협의 등
  
- 중국은 대한반도의 총체적인 영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에서의 역할과 지위 강화를 시도
  - 북미, 북일 관계 개선시 대북 영향력 약화 가능성에 대비, 대북한 각종 지원과 설득

## IV. 북한 경제·사회 전망

### 1. 계획부문의 시장의존도 증가 및 시장부문의 지속적 확대

- 최근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자원이 계획부문에 집중되는 등, 계획영역의 일부 회복이 감지되고 있음.
  - 시장에 대한 과세를 통해 시장영역의 잉여를 국가 계획영역이 흡수하고 있는 바, 이는 계획영역의 대시장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 예: 번수입지표에 의한 징세, 종합시장 장세·거래세 부과, 유희 건물 임대료 수매상점 신설 및 임대세 부과, 부동산 사용료 부과, 수입물자교류시장의 생산재 거래 허용, 기관 소속 무역회사의 대외무역, 시장판매, 주유소 운영 등의 사례
- 시장경제 부문의 절대·상대적 확대
  - 종합시장의 확대·팽창, 수매상점 확대 및 무역량 증가 등
- 평양 19개 행정구역 중 18개 구역에 최소 1개, 전국적으로는 군 단위별 1~2개, 시 단위별 3~5개, 전국적으로 300~350개 정도의 종합시장 설치(04.3 현재)
  - 시장규모는 3~4만 명 인구 시·군에 600 매대, 4~6만 명 시·군에 900 매대, 5~7만 명 시·군에 1,200 매대, 그 이상의 시·군에는 2,000 매대 정도로 파악
  - 국영상점의 수매상점 전환 비율이 70% 이상으로 추정

- 북한 경제는 현재 ‘시장과 계획의 병존’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 부문이 계획부문을 잠식하는 구조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쌀에 대한 전략 수매를 시도(05.10)하는 등, 배급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아, 먹는 문제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견지
  - 이는 개혁조치에 상응하는 생산증가를 기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나,
  - 생산기반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 생산기반의 확보는 북한 자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시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화 경향은 지속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활동 확대에 따른 서비스 분야의 새롭고 다양한 경제재화 등장,
  - 카드결제, 상표권의 거래가 가능한 환경 조성,
  - 자본주의 상거래 행위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경제행위의 발생이 예상되며,
  - 불합격품생산죄, 품질감독질서위반죄 등을 통해 제품의 질을 높이고, 질적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질 것으로 봄.

## 2. 개혁 부작용 최소화와 체제 안정화 노력 지속

### 가. 체제안정화 노력과 부동산 및 금융관련 조치

- 개혁 부작용 최소화와 체제안정화 노력은 2002년 7·1조치 이후 북한이 취한 일련의 법 제·개정 조치를 통해 잘 인식할 수 있음.
- 북한은 제품생산허가법(02.7), 도시계획법(03.3), 컴퓨터소프트웨어법 및 소프트웨어산업법(03.6), 회계법(03.7), 마약관리법(03.8), 수로법(04.3)을 제정했으며,
  - 농업법(02.6), 화폐유통법(03.8), 사회주의 상업법(04.6), 재정법(04.4)을 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향후 일정기간 동안 북핵문제 등 대외여건상 미흡으로 7·1조치에 상응하는 경제개선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움.
- 다만, 기업소·임야사용료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법안 제정 및 금융개혁, 외자유치 관련 법·제도 개선조치와 함께,
  - 단일은행제도에서 복수금융제도로 이행하는 초보적 금융개혁 조치 등 경제제도개선조치를 추진할 가능성은 존재(민화협참사 서철민, 06.5.19 평양상품전람회 참관자 답례만찬 시 언급)
-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틀은 유지하되, 합영은행에 상업은행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분적 이원화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그 동안 선불 충전식 현금카드 출시(2005년 연말)하고, 외화 예금이 증대되는 현상에서 미루어 유추할 수 있음.
  - 최근 북한 금융부문 일꾼들의 중국 연수 동향 지속적으로 파악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상업은행법과 같은 법 제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음.

## 나. 대외개방 확대

○북한은 체제유지의 관건인 식량난·에너지난 극복, 공장 개진·현대화 사업 등에 필요한 경화와 원자재 확보에도 부심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위해 대남·대중관계 지속은 불가피한 바,
- 선택적·제한적 규모에서나마 대외개방 및 남북경협 확대를 지속·도모할 것임.

○또한 변경무역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국가 공식 영역에 편입시키는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항구 등 산업기반시설 개방과 이의 개발을 위한 해외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두만강 지역 12개 세관 중 회령 등 4개 세관에 북·중 자유무역시장(무관세 자유시장) 설치를 합의하고 시장건물 건설을 완료
- 남포, 원산, 신의주, 흥남, 라진항 개발을 위한 대중국 협의
- 미·일 지역 교포상공인을 대상으로 유리한 공장입지 제공, 중국 및 동남아 대비 저임금 및 세금우대 조치 보장 등

## 다. 체제이탈 현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

○다음과 같은 체제이탈적 현상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 김정일 이상화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시각
- 집단주의 정신의 약화 및 개인주의 성행

- 물질주의 팽배 및 부정부패 현상
  - 사회주의 실패에 대한 인식의 확산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와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의 퇴조 현상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생존을 위한 ‘돈벌이 바람’: 농장 일보다 텃밭 일에 더 전념하거나, 농장의 식량, 농기계 및 공장기계를 시장에 내다 파는 행위가 성행하고,
  - 외화벌이 재외기관이나 무역회사, 대외사업부문, 호텔근무, 해외연수기회 선호 현상이 증가하는 한편,
  - 공장 원자재, 설비, 제품의 절취, 시장판매 현상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3. 관료부패의 심화

- 북한의 경제 개혁조치는 관료부패를 조장시킬 가능성 상존
- 관료부패는 공적 영역 또는 국가영역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며, 국가권력의 잠식을 가져올 것임.
- 이는 일종의 개혁부패(reform corruption)로서 정책변화가 관료들로 하여금 사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조직의 운영원리에 밝은 관료들이 법제도의 정비 사이의 시간차를 이용, 부패에 관여할 여지가 커지는데 따른 것임.
- 개혁과정, 사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과의 접촉 창구는 대부분 관료의 영역에 속해 있어 비리의 개연성은 개혁이전보다 훨씬 높아짐.

- 사회주의의 공백은 변화가 가속화 될수록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 의해 매워질 것으로 예상

○특히, 북한 주민들의 조선노동당과 국가에 대한 절대적 신임이 크게 줄어들고, 주체사상에 대한 신념의 약화를 동반할 것임.

## V. 북한 경제개혁의 시사점과 대북경협 과제

### 1. 북한의 경제개혁과 변화의 불가역성

- 북한의 시장지향적 개혁 경향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시장 촉진과 억제정책이 반복될 것임.
  - 자력갱생형 시장경제는 불가역적 수준인 반면, 북한 당국으로서는 계획경제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
  - ‘성장’을 목표로 진행된 시장화가 ‘통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북한이 당면한 딜레마라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에 따른 변화를 되돌릴 가능성은 희박함.
  -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개혁을 통한 효율성 창출에 주력
  -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개혁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음.
  - 경제의 시장화로 평가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나, ‘사회주의 연성화’를 담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개혁의 부작용에 따른 이전의 사회주의 체제로 회귀를 모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
  - 회귀를 시도할 경우,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음.

## 2. 경제개혁에 따른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 경제개혁으로 인한 내부 역량에 의해 정권상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
  - 사회통제가 내부 역량에 의한 급변 사태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임.
  
- 그러나 강력한 사회통제는 내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바, 북한은 안정적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

## 3. 대북 경제협력의 과제

- 향후 북한에게는 경제개발이 중심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기반시설 및 필수 원자재 확보가 관건이 될 것임.
  - 이를 위해 관광, 지하자원 활용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에 진력하는 한편,
  - 사회간접시설 확보, 원유·식량, 코크스 등 필수 원자재 수입을 위해 가공무역을 통한 수출산업 육성에도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남한으로서는 북한 경제특구를 통한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지속적 경제개혁을 담보할 수 있는 투자 및 기술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대외경협 여건 개선, 대남경협기구의 확대개편 및 효율적 운영 지원, 수입물자 교류시장에의 남한 기업 참여, 공장, 기업소의 개건·현대화에 요구되는 원자재 지원 등

- 남한의 대북 교역물자 및 지원물자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남북한 기업인 간 상호방문 주선 및 경제사절단 교환 등이 필요함.
- 대중국 경제 결속 강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요구되는 바, 소비재와 생산재 분야에서 북한의 자연자원이나 농업 생산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경협을 추진하는 한편,
- 한·중간 협력을 통해 비료공장 건설 등 대북 진출을 모색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상과 같은 대북 협력 과제는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자세변화와 연결·추진해야 할 것임.
-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일의 유엔 안보리 제소와 대북 경제제재 추진과 관련된 대응방안 마련이 본 과제 추진의 당위성과 긴급성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임.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행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행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Ⅱ)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흙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통일정세분석 2006-08

---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1-2525, 팩스 : 901-2544  
인쇄처 도서출판 늘봄 전화 : 2275-5326  
인쇄일 2006년 7월 일  
발행일 2006년 7월 일

---